



‘전력망’ 국가안보·경쟁력 열쇠 산업계, 수출 겨냥 기술 고도화

전력망 구축, 국가사업 격상
인허가 절차 대폭 개선 추진
관련 사업 인프라 구축 속도
두산·LS일렉트릭 기술 주목

전력망이 단순한 에너지 인프라를 넘어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전력망 확충에 정책적 드라이브를 거는 한편 국내 산업계도 글로벌 수출 시장을 겨냥한 기술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8월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전력망 특별법’을 통해 전력망 구축을 국가 차원의 핵심 프로젝트로 격상시킬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은 국가첨단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전탑 건설 등 환경훼손과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 사회적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균형있는 전력 인프라 확산을 도모하는 목적도 포함된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과정에서 원전과 LNG 등을 활용한 안정적 전기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정부가 차세대 원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형모듈 원자로(SMR) 사업이 조기 착공 국면에 들어서면서 관련 산업 전반에도 활력이 돌고 있다. 특히 SMR 제작·설계 기술을 보유한 두산에너지는 에너지 기술 시장에서 빠

르게 입지를 넓히며 주목받고 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중심이 된 ‘K-원전’의 26조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 계약이 최종 체결되면서 원전업계의 수익성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두산에너지는 해당 사업에서 주요 기기 공급과 시공을 담당한다.

아울러 두산에너지는 원자력 및 가스터빈 사업 본격화에 대응해 적기 생산 역량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원전 관련 기술 투자 규모는 지난 2023년 1846억원에서 지난해 2140억원으로 16% 확대됐다. 이 가운데 공장 신증설과 개보수에만 지난 2023년 533억원에서 지난해 723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사업을 중심으로 한 전력망 확충 방안도 집중 논의되고 있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사업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서해안에 총 620km 길이의 해저송전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이 대통령은 2036년이었던 목표시점을 2030년으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HVDC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인 LS일렉트릭이 주목받고 있다. LS일렉트릭은 지난 2011년 부산에 HVD C 전용공장을 준공하고 HVDC 변압기 생산부터 설치까지 사업 전반에 밸류 체인을 구축해왔다. 이런 배경에서 업계는 LS일렉트릭이 ‘서해안 에너지 고

속도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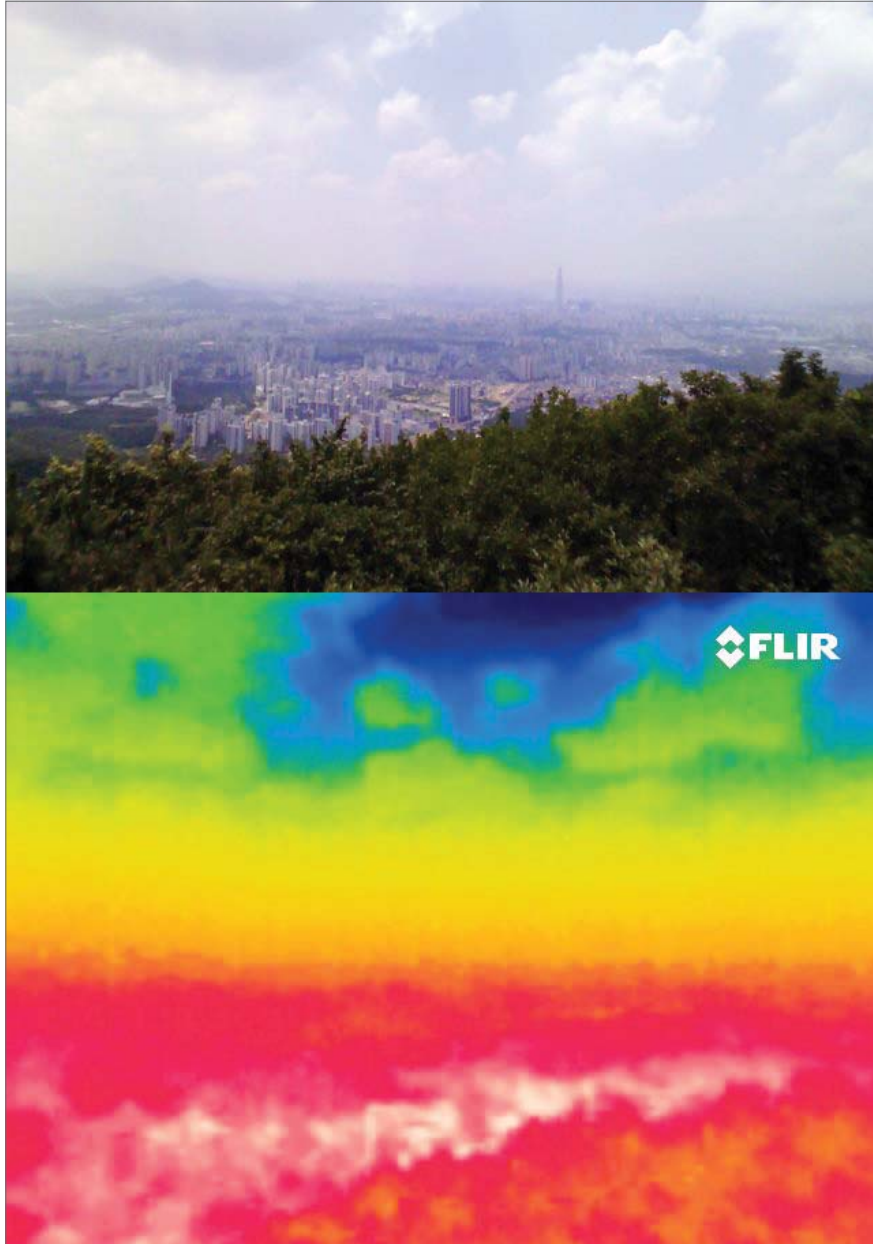
글로벌 경쟁 구도도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미국은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설치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가스 발전도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진단된다.

아울러 국내 기업들은 수출 확대를 통한 글로벌 시장 확보에 발 벗고 나섰다. 두산에너지는 SMR(소형모듈 원자로)과 기존 대형 원전 기술을 동시에 수출할 전략이다. LS일렉트릭 또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배전반과 초고압변압기를 수출 중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전력망 사업을 국가 차원의 전략 사업으로 지정하면서 관련 사업 인프라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그동안 전력 설비를 구축하려면 입지 선정 등 인허가 절차가 복잡해 실제 사업 착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으나 법 제정으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면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송전로나 변전소 설치에 따른 지역 주민 반발은 여전히 변수”라며 “일부지역에서는 환경영향 등을 이유로 반대 여론이 형성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석탄 중심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자는 의견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불타는 서울 도심

서울의 낮기온이 36도까지 오른 8일 오후 경기 성남시 남한산성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서울 도심이 붉게 보이고 있다.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은 온도가 높을수록 붉은색, 낮을수록 푸른색을 나타낸다. /뉴시스

트럼프, ‘韓 25% 관세’ 연기 이달 말까지 3주 추가 유예

내달 1일부터 상호관세 부과 통보
트럼프, 한국기업 미국 생산 유도

백악관발 관세부과의 유예 기한이 기존의 7월8일 자정(미동부기준)에서 7월 말 자정까지로 늘어났다. 연장된 시한은 우리 시간으로 8월1일 오후 1시다. <관련기사 4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발표한 유예 기한을 이틀 앞둔 7일 연장(3주 남짓)을 지시했다. 트럼프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관세율 조정 연장’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 세계 각국이 대상이다.

행정명령문에서 트럼프는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 진행상황, 백악관 참모들의 권고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그간 유예를 연장하는 대신 각국에 서한을 보내 관세율을 통보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실제 이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한국과 일본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날 연장 발표에 앞서 트럼프는 한국과의 무역 관계가 상호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8월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서한의 수신자는 ‘이재명 대통령’으로 명기됐다.

트럼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서한에서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관계는 상호주의와는 거리가 있다”며 “2025년 8월1일부터 우리는 미국에 들어온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릴 것이다.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라고 적었다.

이는 당초 오는 9월부터 적용 예정이던 25% 상호관세의 관세율은 유지한 채 부과 시점을 뒤로 미룬 것이다. 25%를 관철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최종 타결까지 시간을 더 확보하려는 심산인 것으로 풀이된다. <2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4.6조… 56% ‘뚝’

반도체 사업 부진·대외약재 여파
6분기 만에 5조원 아래로 내려가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반도체 사업 부진과 대외 약재 여파로 시장 기대를 크게 밑도는 실적을 보였다. 영업이익은 4조원대로 떨어지며 6분기 만에 5조원 아래로 내려갔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74조원, 영업이익 4조6000억원의 잠정 실적을 8일 발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09% 소폭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55.94% 급감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 6.49%, 영업이익 31.24% 각각 줄었다. <관련기사 4면>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



8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뉴시스

션(DS) 부문에서 대규모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반영되며 수익성이 악화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출하지연, 대중 수출 규제 등의 영향도 겹쳤다.

이날 발표된 영업이익은 주요 증권

가 전망치인 5조6000억원에서 6조원대보다 1조원 이상 낮은 수준으로, 어닝쇼크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 측은 “DS 부문이 재고 충당금과 AI 칩 대중 수출 제재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이익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메모리 부문은 일회성 비용이 반영돼 실적이 감소했지만, HBM은 일부 고객사에 평가 및 출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모바일경험(MX)사업부도 갤럭시 신제품 효과가 약화하며 비수기 영향이 나타났고, 생활가전과 TV 부문도 관세 부담과 시장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혜민 기자 hyem@



▲李 대통령 “국무회의의 개인 정치에 활용해선 안 돼”… 이진숙 방통위원장 겨냥 /사진 뉴시스
▲박찬대, 윤상현 압수수색에 “체포동의안 넘어 오면 통과시킬 것”

▲송언석, 특검 윤상현 압수수색에 “전형적인 정치보복”
▲안철수, 김문수·한동훈에 “전당대회 함께 출마해 혁신 경쟁하자”

▲유엔사 부사령관 “평양 무인기 침투 조사 중… 세부사항은 못 밝혀”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법안, 與 주도로 교육위 전체회의 통과